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내경제 119

<식량>

올해도 식량부족국가 지정

<북한의 장마당>

북한의 시장 개수와 커지는 내수시장

대외경제 120

<대북제재>

미국의 추가 제재와 북미무역

제재 회피를 위해 주로 아프리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말레이시아

국제금융거래망서 퇴출된 북한은행

북한대사관에 불법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한 폴란드·루마니아 정부

<대외교역>

살아나지 않은 북러 교역

<대북지원>

영국의 대북 공적개발 원조

대내경제

<식량>

RFA(3.2, 3.27)

올해도 식량 부족국가 지정

FAO(식량농업기구)가 지난 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는 북한을 포함한 37개국이 외부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국가로 지정됨. 이는 2015년 8~9월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와 2016년 식량확보 및 공급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임.

유엔 OCHA(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발표한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72퍼센트를 차지하는 1,800만명 가량이 식량과 영양 부족상태임.

<북한의 장마당>

KBS World(3.16), 서울경제(3.16), 헤럴드경제(3.28)

북한의 시장 개수와 커지는 내수시장

북한의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 수가 하루 평균 100~180만명으로 추정되었음. 연구기관마다 상이한 점이 있지만, 북한의 공식 시장 개수는 404~439개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존스홉킨스 산하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436개, 국가정보원: 439개, 통일연구원 공동연구팀: 404개). 북한 내 종합시장은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음. 통일연구원은 2016년 404곳의 종합 시장 중 평안남도지역에 가장 많은 116개 종합시장이 위치해있다고 밝힘. 종합시장 종사자 수는 매대 수를 바탕으로 109만 9,052명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 개인 사업이 발전하고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력에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대외경제

<대북제재>

VOA(3.8, 3.18), 매일경제(3.5, 3.25), 서울경제(3.8), 파이낸셜뉴스(3.9), 연합뉴스(3.23), RFA(3.1, 3.31)

미국의 추가 제재와 북미무역

美 상무부와 법무부는 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과 대 이란제재법을 위반했던 중국업체 ZTE가 11억9천만달러(약 1조 3,702억) 벌금을 내기로 합의 했다고 밝힘. ZTE는 2010년부터 6년 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장비 3,200만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하고, 북한에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하여 제재를 위반함.

美 국무부는 24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음. 우선 공개된 명단에는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를 포함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9개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음.

美 재무부는 3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3개(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기업 1개와 북한인 11명을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올림. 이름을 올린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파는 ‘백설무역’이며, 제재대상의 북한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중인 파견자임.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반영하듯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는 2016회계 연도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승인한 대북 수출 건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힘. 2015회계연도의 경우 18건(1,121만 9,607달러), 2014회계연도의 경우 21건(436만 5,507만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한 바 있음.

제재 회피를 위해 주로 아프리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교적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대체로 대북제재 이행 정도가 느슨한 편으로 『AP통신』은 전하고 있는데, 전체 54개국 중 불과 11개국만이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함. 북한은 예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우간다의 경우 북한군으로부터 공군 조종사와 기술자가 훈련받고 있으며, 이 계약은 2018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콩고도 최근까지 대통령 경비대와 경찰특공대용 자동 권총과 다른 소형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한 바 있음.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3월 7일 북한 근로자 37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이들은 다리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유효한 취업허가증이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한 것으로 나타남.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는 북한 노동자 17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레이시아 거주 북한 주민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진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본래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바 있다. 다만, 교역액은 2016년에 약 420만달러로 나타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함.

국제금융거래망서 퇴출된 북한은행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3월 6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유엔제재 대상인 북한의 은행 3곳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해서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들 은행은 조선대산은행,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으로 드러남. 국제금융거래망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4곳의 북한은행은 국제금융거래망에 잔류하고 있었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대변인은 17일에 이들 은행 또한 회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북한대사관에 불법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한 폴란드·루마니아 정부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해 부지 불법 임대사업을 중단하도록 2월에 외교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폴란드 외교부는 이미 지난 1월 북한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바르샤바 주재 북한대사관은 그동안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짐.

<대외교역>

VOA(3.16)

살아나지 않는 북러 교역

중국에 이은 북한의 2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교역액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러시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6,800만달러, 대북 수입은 약 870만달러에 그쳐 2015년 대비 8.9% 줄었음.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북러 교역액을 1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북러교역은 2014년에 11.4%, 2015년에는 9%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북러교역의 감소세와 부진은 침체된 러시아의 내수와 대북제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대북지원>

VOA(3.3)

영국의 대북 공적개발 원조

영국 외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17회계연도 공적개발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6~17회계연도에 단 1건(10만파운드)의 공적개발원조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제공된 원조는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책정된 20만파운드 중 절반인 10만파운드만 지출되었음. 전년도 회계연도에는 6건(23만 3,000파운드)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영국정부의 대북지원이 상당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음.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3.01] 미, 작년 대북 수출 승인 건수 '0' (RFA)
- [2017.3.02] 북한 식량부족국가 올해도 지정 (VOA)
- [2017.3.03] 영국, 2016-17회계연도 대북 공적개발 원조 1건 뿐 (VOA)
- [2017.3.05] “북한, 제재 회피에 아프리카 주로 이용”...유엔 보고서 분석 (매일경제)
- [2017.3.08] 미국, 북한·이란제재 위반 중국 기업에 12억달러 벌금 (VOA)
- [2017.3.08] 북-말레이 교역액 미미...지난해 420만 달러 수준 (VOA)
- [2017.3.08] 美 北거래 中ZTE에 벌금폭탄 (서울경제)
- [2017.3.08] 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북한인 근로자 37명 체포 (서울경제)
- [2017.3.09] 北 은행 3곳 국제금융거래망서 퇴출...무역거래·송금 등 치명타 (파이낸셜뉴스)
- [2017.3.14] 폴란드·루마니아 “북한대사관에 불법 임대사업 중단 요구” (VOA)
- [2017.3.15] ‘美 블랙리스트’ 北은행들, 국제금융거래망에 잔류 (서울경제)
- [2017.3.16] 北 커지는 내수시장...변화 바람 부나 (서울경제)
- [2017.3.16] “살아나지 않는 북-러 교역...침체한 러시아 경제-대북제재 탓 (VOA)
- [2017.3.18.] 스위프트 “북한 은행 전면 퇴출”...비 제재대상 은행도 접근 불가 (VOA)
- [2017.3.23] ZTE, 美법원서 北·이란제재위반 유죄 인정...1조 3천억원벌금 (연합뉴스)
- [2017.3.25] 미국, 중국 기업·개인에 추가 제재...북한 생필무역 포함 (매일경제)
- [2017.3.27] 유엔 긴급구호대상자 북한이 최다 (RFA)
- [2017.3.28] “북한 종합시장 404곳...전국 유통망 핵심역할” (헤럴드경제)
- [2017.3.31] 트럼프, 첫 대북제재 석탄기업·해외근무 11명 (RFA)